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2024년 5월 14일 | 책임연구원 이지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904천 km <sup>2</sup> 	<b>인구</b> 2.7억 명 (2023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비동맹중립 
<b>GDP</b> 13,712억 달러 (2023 <sup>e</sup> ) 	<b>1인당 GDP</b> 4,942달러 (2023 <sup>e</sup> ) 	<b>통화단위</b> Rupiah (IDR) 	<b>환율(U\$기준)</b> 15,236.89 (2023) 

- 적도에 위치하며 약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도서국 인도네시아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내에서 최대 경제규모(세계 16위) 및 최대 인구(세계 4위)를 보유한 나라로, 우리나라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
-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광물 등 부존자원과 팜오일, 고무, 커피 등 농산물이 풍부하고, 2.7억 명의 인구 중 약 40%가 24세 이하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산업의 다운스트림 부문에 투자하는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음.
- 2019년 연임에 성공한 Joko Widodo 대통령은 2024년 10월 임기가 종료되고, 2024년 2월의 대선에서 승리한 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당선인이 10월 새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임. 프라보워 당선인은 후보 시절 조코위 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9. 18 수교 (북한과는 1964. 4. 16)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71년), 임업협정('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89년), 항공협정('89년), 투자보장협정('94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7년), 문화협정('07년), 범죄인인도조약('07년),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1년), 형사사법공조조약('14년), 국방협력협정('18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20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출	8,550,335	10,215,899	9,140,239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수입	10,725,095	15,734,850	12,145,901	석탄, 천연가스,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598건, 18,730,880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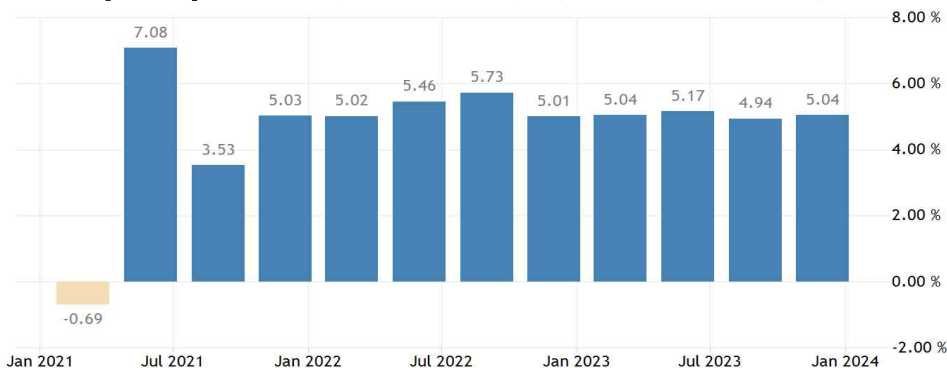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5.0	-2.1	3.7	5.3	5.0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0	1.6	4.1	3.7
재정수지/GDP	-2.1	-6.1	-4.4	-2.2	-1.6

자료: IMF, EIU

### 2023년 경제는 견조한 내수가 수출 둔화를 상쇄한 결과 5.0% 성장 추정

-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석탄,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니켈), 농업자원(팜오일, 고무, 카카오, 커피),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특히 광물자원의 수출 관련 제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등 광업 부문의 발달이 장기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3년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이 상품수출 부진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성장에 힘입어 2022년(5.3%)보다는 약간 낮지만 정부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 5.0%의 견조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2000~19년) 간 연평균 5.3%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던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2.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21년 2분기부터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인프라 개발 사업 재개, GDP의 약 52%(2022년 기준)에 달하는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5.0%보다 약간 높은 5.3%를 기록함.
- 2023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농산물 수확량 증가, 루피아화 절상으로 인한 수입비용 하락 등으로 둔화된 소비자물가상승률(2022년 4.1% → 2023년 3.7% 추정)이 민간소비를 장려하였음.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전년 대비 4.92% 성장한 가계소비가 수출 부진을 상쇄한 결과 5.0%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분석하였음.

[그림 1]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2021년 1월~2024년 1월)



자료: Statistics Indonesia, Trading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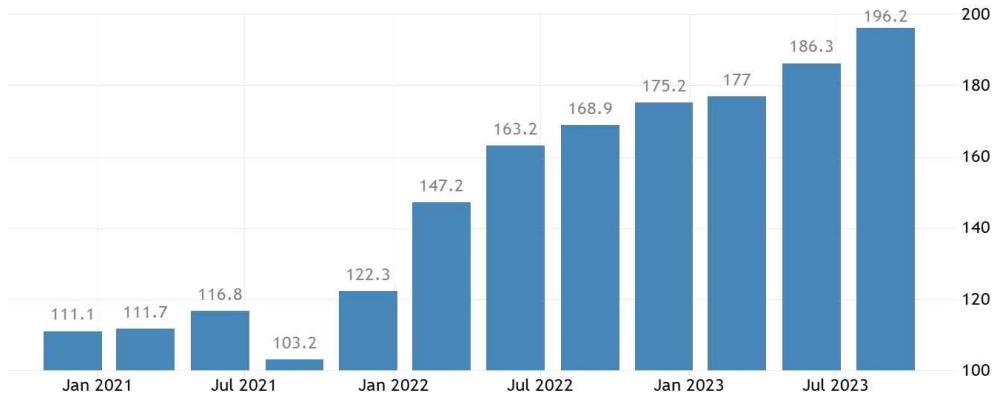
## 국내경제

-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473억 달러(744조 루피아)를 기록했음. 118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니켈 가공 산업이 FDI 유입 증가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FDI가 많이 유입된 주요 산업으로는 광업, 운송, 창고업, 통신, 화학 및 제약, 펄프 및 제지 등이 있음. 2023년 대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임.

\* 금융,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은 투자부 집계에서 제외되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 부문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요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원석·원광의 수출을 금지하여 제련과 관련한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09년 제정된 '신광업법'에 따라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부가가치 창출과 투자 유치 목적으로 광물 수출업체들의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부터 수출을 금지한 니켈 원광에 이어 2023년 6월부터는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했음.

[그림 2]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추이(2021년 1분기~2023년 3분기)



단위: 조 루피아

자료: BKPM, Trading Economics

## 2024년 경제는 견고한 가계소비 등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한 5%대 성장을 유지할 전망

- 2024년에도 낙관적인 경제성장을 예상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4.7~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2024년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요 동력으로는 견고한 가계소비, 2월 선거(대선, 총선, 지선)에 따른 물품 조달 수요 및 소비 증가, 국가전략사업(National Strategic Project) 및 신수도 건설 등이 꼽히고 있음.
-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긍정적인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그에 따른 상품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기관별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IMF ('24.04)	ADB ('23.12)	세계은행 ('23.12)	EIU ('24.04)	FitchSolutions ('24.0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3.11)
2024년	5.0	5.0	4.9	5.1	4.9	4.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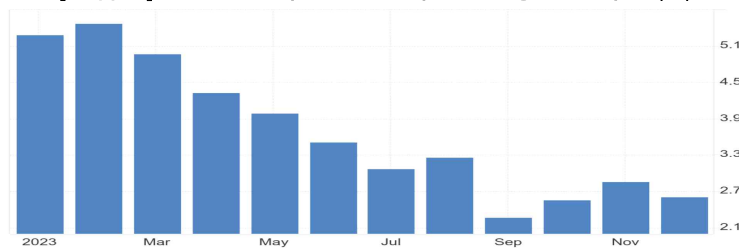
## 국내경제

- 지난 2월의 선거에서 조코위(Jokowi)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현 국방부 장관)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선거로 인해 투자를 유보하던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됨.
  - \* 인도네시아는 대선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2위 후보가 다시 2차투표를 치르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음.
- FitchRatings는 금년 10월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조코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었던 신수도 건설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 상품의 다운스트림화, 2차 전지 및 전기차 제조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함.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에서 통제

- IMF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치 범위인 2~4%의 상단인 3.7%를 기록하여 전년(5.5%) 대비 안정됨. 2023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였으나, 4월을 기점으로 3%대에 진입하고 8월부터는 2%대까지 하락하여 2023년 하반기 이후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전년보다 0.5% 낮은 1.5~3.5%로 발표함.
- EIU는 2023년 말 엘니뇨로 인한 가뭄이 농작물 작황에 피해를 줌으로써 올해 초반 식량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분기부터는 식량 및 연료 국제가격의 안정, 2023년 단행한 긴축 통화정책의 지연된 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3] 인도네시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Statistics Indonesia, Trading Economics

-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인상 압력에 대응코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250b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후 8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4년 4월 25bp 인상을 단행하였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한동안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3.5%로 유지했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총 225bp)을 단행하였음.
- 이후 8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후 2023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고 올 3월까지 6.0%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강달러 현상 지속에 따른 루피아 가치하락으로 4월 다시 0.25%p 인상을 단행하였음.

## 국내경제

### 2023년 재정수지 적자는 세입 증가로 12년래 가장 낮은 GDP 대비 -1%대 기록 추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상한(GDP의 -3%)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연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해당 법령의 적용을 3년 간(2020~22년) 유예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의회는 2003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 2020년 3월 국가재정법이 정한 재정수지 적자 상한선을 최대 3년 동안 초과할 수 있다는 새 법안을 제정하였음. 동 법안은 별도의 특별법이 추가로 제정되지 않는 한 202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3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1.65%로, 최초 설정한 목표인 -2.84%와 추경예산의 -2.27%를 모두 하회하는 1%대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 이는 12년래 가장 적은 적자 규모임.
- 스리 물리아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세입은 2022년 대비 5.3% 증가한 2,774조 3천억 루피아이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4.5% 축소된 347조 6천억 루피아임.
- IMF와 EIU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새롭게 부과되는 전자담배세로 인한 추가 세원 확보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의 202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2.2% 및 -2.4%로 전망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1월부터 전자담배 흡연 억제를 위해 기존의 전자담배 소비세에 더하여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EIU는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이 11%에서 12%로 인상됨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28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2%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4]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Trading Economics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 상 수 지	-30,279	-4,433	3,511	13,215	-1,567
경상수지/GDP	-2.7	-0.4	0.3	1.0	-0.1
상 품 수 지	3,508	28,301	43,806	62,672	46,347
상 품 수 출	168,455	163,402	232,835	292,538	259,468
상 품 수 입	164,948	135,101	189,029	229,866	213,121
외 환 보 유 액	122,707	128,398	131,405	124,178	132,621
총 외 채	402,106	417,046	416,471	399,256	401,525
총외채잔액/GDP	35.9	39.4	35.1	30.3	29.3
D.S.R.	12.6	18.4	14.5	8.4	10.7

자료: IMF, EIU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와 상품 수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경상수지는 GDP의 -0.1% 규모의 적자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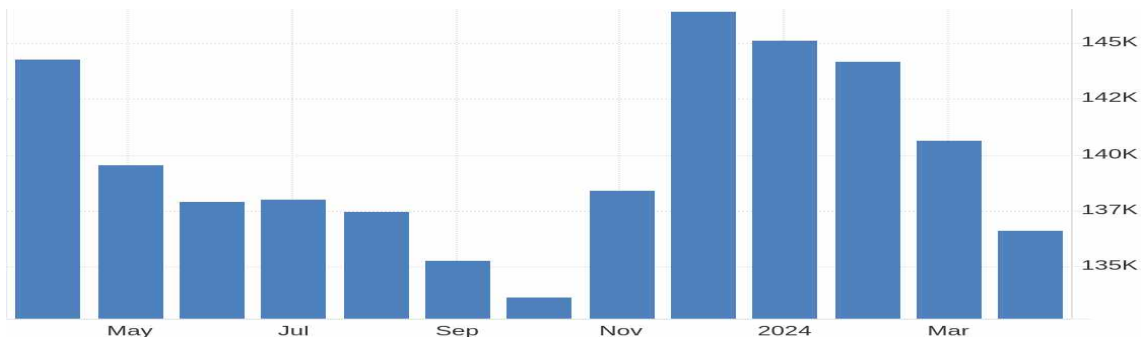
- 2022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수출액을 기록했던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와 상품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보다 감소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2022년 GDP 대비 1.0%의 흑자에서 2023년 GDP 대비 -0.1%의 적자로 전환됨.
- 2023년 인도네시아의 상품수출액은 2,594.7억 달러(2022년 2,925.4억 달러보다 11.3% 감소), 수입액은 2,131.2억 달러(2022년 2,298.7억 달러보다 7.3% 감소)로 상품수지는 463.5억 달러의 흑자(2022년 626.7억 달러보다 26.0% 감소)를 기록하였음. 석탄, 팜유, 니켈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 가격 하락이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침.
-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지속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관광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적자 규모가 전년(199.6억 달러)보다 10.2% 감소한 179.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외채상환능력

### 국제 적정성 기준을 상회하는 외환보유액 유지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2024년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362억 달러로 3월 말(1,404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2023년 12월부터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대외부채상환과 루피아 안정을 위한 환율 방어에 따른 결과임.
- 4월 말 외환보유액은 수입 6.1개월 혹은 수입 6.0개월 자금 조달 및 정부 외채 상환에 해당하여 수입 3개월의 국제 적정성 기준을 상회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해 2019년부터 정부령(PP No. 1/2019)을 통해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외화로 결제대금을 받을 시 국내은행 계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23년 8월부터는 수출업자들의 수출대금 일부를 국내에 우선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효하였음.
- 천연자원은 광업, 작물재배업, 임업, 어업 분야의 생산물을 포함하며,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대금을 외환은행 특별계좌에 예치해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2023년 8월 1일부터 수출 수익금(DHE)의 최소 30%를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에 3개월 이상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림 5]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 추이(백만 달러)



자료: Trading Economics; Bank Indonesia

### 경제규모 대비 외채 비중은 비교적 양호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상한선을 GDP 대비 -3%로 설정함으로써 낮은 공공 채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GDP 규모가 감소하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차입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39.4%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안정세와 인도네시아 경제회복으로 GDP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3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0% 아래로 축소됨.



## 구조적취약성

### 원자재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출구조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팜유, 니켈 등은 세계경기 동향과 국제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원자재 국제가격의 하락은 인도네시아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2024년 석탄 수출은 전 세계적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2023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3년 석탄 출하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5억 톤이었으나, 석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590억 달러에 그침(수출량은 2022년 대비 13% 증가).
-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이유로 2024년 팜유 수출이 2023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BPS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 총 수출의 11.71%를 차지한 팜유 및 관련 제품의 수출액은 284억 달러로 전년(약 351억 달러) 대비 19% 감소하였음.
- 2024년 1월 22일 기준 니켈 가격(London Metal Exchange, 현물)은 톤당 1만 5,785달러로 2023년 최고가(3만 344달러) 대비 절반 수준임.\* 주요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니켈 국제가격 하락은 전 세계 니켈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공급량 급증에서 기인함. 전 세계 니켈 생산량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0%(77만 톤)를 기록한 뒤 2021년 38.1%(104만 톤), 2022년 44.8%(160만 톤)로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2023년에는 47%(175만 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5월 7일 현물 가격은 18,755달러임.

###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인프라 개발

-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과 낙후된 인프라는 국가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강조했으며, 실제로 그의 재임 동안 많은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 아울러 2019년 재선에 성공하고 국가적 숙원사업이었던 수도 이전을 전격 발표하면서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공적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수도 건설의 경우 예산 규모가 466조 루피아(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예산의 19.2%만 재정지출로 충당하고, 54.4%는 PPP로 조달하며, 26.4%는 민간기업 및 국영기업이 담당할 계획임. 추가적인 자원 확보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과 국유지(자카르타 및 동부 칼리만탄)의 상업화가 고려되고 있음.
-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일본, 이란,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 투자를 제안했으나, 자금 조달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인구 보유

-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원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 대두, 경제안보 측면에서 자원 확보의 중요성 강화 등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생산량 세계 1위인 팜오일을 비롯하여 고무, 카카오, 커피 등 풍부한 농산물과 2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니켈(전 세계 매장량의 22% 보유),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 핵심 전략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함.
-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총인구(2023년 말 2.7억 명)의 약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해당됨.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020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1년 53%에서 2020년 70%로 증가했고, 향후 해마다 270만 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40.6%,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인구가 전체의 23.9%로, 인구 보너스\*에 따른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15년 간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 비중이 약 7%에서 20%(세계은행 추산 5,200만 명)로 증가하는 등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내수시장 발달이 진행되고 있음.

\*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도 증가하는 현상

###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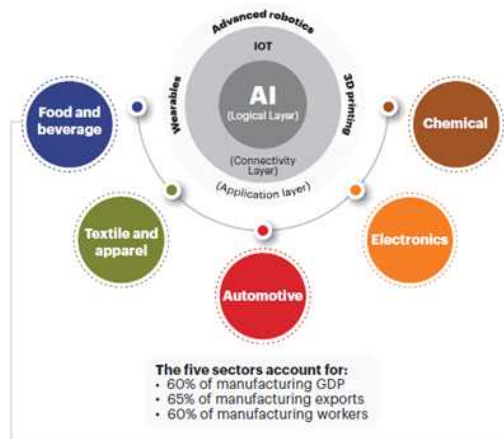
- Google·Temasek·Bain&Company의 'e-Conomy SEA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3년 820억 달러(거래액 기준, Gross Merchandise Volume)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해 1,090억 달러에 이르고, 2030년에는 2,100~3,6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동력으로는 큰 규모의 내수시장,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가 다수인 인구구조, 외국자본 유입, 국가의 육성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확산된 재택근무·온라인 학습 등을 꼽을 수 있음.
- 디지털 경제의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ICT 인프라와 낮은 금융 포용성 등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최근 인프라 구축과 전자결제 시스템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일부 개선되고 있음.

## 정책성과

### “Making Indonesia 4.0”을 통한 제조업 육성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업 육성 계획인 “Making Indonesia 4.0”에 기반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재 세계 16위인 경제규모를 2030년까지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핵심 전략 방안으로 제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꼽았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 기여도, 수출잠재력을 고려한 산업매력도, “인더스트리 4.0”\*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식·음료, 화학, 섬유·봉제, 전자, 자동차를 5대 우선 육성산업으로 선정함.
  - \*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생산 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 노동력, 큰 내수시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업 육성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동시에 인프라 부족은 물론 산업 내 전-후방 연계 가치사슬 취약, 디지털 플랫폼 부족, 정부 재원 및 혁신 주도 역량 부족, 숙련 노동력 부족과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취약 등 선결 과제가 상존함.

[그림 5] Making Indonesia 4.0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원광 수출 금지 등 광업의 다운스트림 부문 육성 노력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광업의 다운스트림 부문 육성을 위해 니켈을 포함한 핵심광물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에서 제련해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겠다고 발표함. 단순 원자재 수출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국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외국 기업이 원자재를 채굴해 바로 수출하는 대신 이를 제품 형태로 가공해 수출토록 유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8년 국내가공요구사항(domestic processing requirements, DPR)을 도입하여 모든 기업이 니켈 광석을 수출 전 국내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2022년 초에는 석탄과 팜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2023년 6월부터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정책성과

- 원래 보크사이트뿐 아니라 구리, 철, 아연, 납 등도 원광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광산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권을 내주는 대신 제련소 건설을 요구하였으나, 구리와 철, 아연, 납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제련소 건설이 늦어지자 2024년 5월까지 원광 수출 금지를 유예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정부는 재무장관 규정 제71/2023호에 따라 제련소 공정률 50% 이상의 업체에 한해 구리 정광(精鑛) 수출을 허용하되, 수출관세율을 5~10%로 인상함.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 아연, 납의 수출관세율도 공정률에 따라 2.5~7.5%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년 1월부터 공정률에 따라 수출관세율을 구리는 7.5~15%, 철, 아연, 납은 5~10% 범위에서 인상함.

## 수도 이전계획의 중단 없는 추진

- 조코위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현 수도인 자카르타가 당면한 문제(교통체증, 기반침하, 환경오염 등)를 완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칼리만탄 섬 동부 지역을 신수도 부지로 선정했으며, 2022년에는 신수도의 이름을 누산타라(Nusantara)로 명명하고 '신수도 건설법'을 통과시켰음.
-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것을 방지코자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20일 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기를 희망함. 조코위 정부는 2024년 독립기념일(8월 17일) 행사를 누산타라에 건설 중인 새 대통령궁에서 개최하고 올 연말까지 수천 명의 공무원을 이주시킬 계획임.
  - \* 1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대통령궁, 정부청사, 국회 등 정부 핵심시설을 옮기는 것이고, 2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6개 위성도시 포함 교육, 의료, 상업 지구 등을 개발하는 것이며, 3단계 사업은 수도 확장으로 2040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전체 수도 이전은 인도네시아 건국 100주년인 2045년에 완성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4년 3월 '자카르타 특별지역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 동 법은 누산타라가 대통령령으로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도로 지정되면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의 특별지역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내에 누산타라를 공식 수도로 지정할 계획임.
- 올 10월 20일 취임할 예정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ibianto) 대통령 당선인도 수도 이전이 중단 없이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Gibran Rakabuming Raka)이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수도 이전을 포함한 현 정권하에서 추진할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사실상 실패한 에너지 보조금 개혁

-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후 해마다 약 300조 루피아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연료 및 전력 보조금 및 보상금을 개혁하여, 보조금에 할당되었던 예산을 인프라 건설, 보건, 교육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음.
  - \*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Pertamina)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하는 연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 정책성과

-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삭감 등 일부 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2019년 재선을 앞두고 삭감되었던 보조금이 다시 회복되었음. 집권 2기 동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보조금 및 보상금이 오히려 증가, 2022년에는 정부 예산 할당량의 3배인 551조 루피아를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음(GDP의 10%).
- 에너지 국제가격 급등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부담을 느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9월 연료(가솔린 및 디젤) 가격을 약 30%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에너지 보조금으로 약 210조 루피아를 지출하였음.
-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는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상충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의 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전력 믹스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4%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7개국(G7),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선진 9개국이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이들 국가와 다자간 은행, 민간 대출기관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 에너지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개도국에 보조금 및 양허성 차관 형태로 지원함.

## 정치안정

### 2024년 2월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 당선

- 2024년 2월 14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전국구 국회의원(Dewan Perwakilan Rakyat, DPR)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Dewan Perwakilan Daerah, DPD),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 DPRD)을 선출하는 총선이 함께 치러짐.
- 2월 14일 정-부통령, 580명의 국회의원, 152명의 지역대표 의원, 2,372명의 주(provinsi) 의회 의원, 17,510명의 시-도(kabupaten/kota)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음.
-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후보 없이 3명의 후보군(정-부통령)이 참여했던 대선은 첫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할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2차 투표)에서 대통령이 확정될 것이라는 초반의 예상을 뒤집고 프라보워(현 국방장관)-기브란(수라카르타 시장, 조코위 대통령 장남) 후보가 59%를 득표하여 당선됨.

[그림 6]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정-부통령 후보

기호 1	기호 2(☆당선)	기호 3
<p><b>PRESIDENTIAL CANDIDATE</b></p>  <p>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17~'22) 교육부 장관('14~'16) Paramadina 대학 총장('07~'15)</p>	<p><b>PRESIDENTIAL CANDIDATE</b></p>  <p>Prabowo Subianto 국방부장관('19~현재) Gerindra당 대표('14~현재) 육군 장성('95~'98)</p>	<p><b>PRESIDENTIAL CANDIDATE</b></p>  <p>Ganjar Pranowo 중부 자바 주지사('13~'23)</p>
기호 1	기호 2(☆당선)	기호 3번
<p><b>VICE PRESIDENTIAL CANDIDATE</b></p>  <p>Muhaimin Iskandar 국회부의장('19~현재) PKB당 당대표('20~현재) 노동부 장관('09~'14)</p>	<p><b>VICE PRESIDENTIAL CANDIDATE</b></p>  <p>Gibran Rakabuming Raka 수라카르타 시장('21~현재)</p>	<p><b>VICE PRESIDENTIAL CANDIDATE</b></p>  <p>Mahfud MD 정치·경제·법 조정장관('19~'24) 대법원 판사('08~'13) 법무부 장관('21) 국방부 장관('00~'01)</p>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정치안정

### 대선 결과에 불복한 낙선 후보들

-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여당(PDI-P)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전의 두 차례 대선(2014년, 2019년)에서 자신의 경쟁 상대였던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했으며,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었던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논란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있었음.
- 3월 20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대선에서 프라보워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두 후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대선 결과 불복청원)하는 등 대선 결과에 불복하였음.
- 낙선한 후보가 가장 크게 문제로 삼는 것은 부통령으로 당선된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임.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23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경험이 있는 후보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주었음.
-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법재판소장이 기피신청을 내지 않고 판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란이 되어 결국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기브란은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었음.
- 낙선한 후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헌법소원 인용도 취소돼야 하며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기브란의 출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유지해야 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프라보워-기브란 후보를 지지하는 등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은 선거 후반 대통령도 개인의 자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음.
- 헌법재판소는 4월 22일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낙선한 두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음.

### 정권 교체 후에도 주요 정책이 중단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프라보워 당선인이 후보 시절 조코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던 점과 부통령으로 당선된 기브란이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점을 고려하면 조코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도 이전, 대규모 인프라 건설,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 금지, 광업의 다운스트림 부문 육성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중단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듯 프라보워가 취임 후 조코위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음.

## 사회안정

### 시행이 연기된 수하물 반입물량 제한 규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여행자를 통한 소비재 수입의 규제를 목적으로 2023년 11월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ng) 제36호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입국자의 수하물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고(90일 유예) 2024년 3월 10일부로 시행하였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규정의 모호성으로 7일 만에 시행을 연기하였음.
- 동 규정에 따르면 입국자는 전자기기, 신발, 직물, 가방, 휴대용 전자기기(핸드폰 등), 음식료품에 관하여 수량 제한을 적용받음. 최대 반입 가능 수량은 입국자 1인당 신발 2켤레, 가방 2개, 직물 5벌, 휴대용 전자기기 5개까지이며, 음식료품은 5kg까지 허용됨.

[표 2]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하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관련 규정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시행 시기	2024년 3월 10일(연기)	
대표적인 제한 물품		
품명	제한(인당)	상세 내용
휴대용 전자기기	2대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등
신발	2켤레	신발 완제품(HS64.01~64.05)해당, 신발 부분품(HS60.06)은 제외
가방	2개	핸드백, 소핑백, 서류가방 등(HS42.02)
화장품	20개	화장품, 비누 등(HS33.04~34.01)
섬유류	5개	모포, 커튼 등(HS63.01~63.08), 중고의류는 제한대상 아님
전자기기류	5개(1,500달러 이내)	식품용 그라인더, 디지털 카메라 등(HS84 및 85 일부 제품)
음식료품	5kg	개별 물품별이 아닌 전체 반입품 총량 기준

자료: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인도네시아 대중은 새로운 규정이 국내 소매 시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관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일반적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귀국하는 자국민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점, 출국 시 반출된 물건과 해외에서 새롭게 구매한 물건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 명확한 설명과 지침의 부족 등을 거론하며 시행을 반대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함.

###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기간은 2024년 10월 종료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할랄 제품 보장법(정부령 2014년 33호)을 제정하고 2017년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 인증청(BPJP)을 설립했으며, 2019년과 2021년 할랄 제품 보장법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강력한 할랄법을 제정하고 5년 간의 유예기간 후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제도 준비 미흡으로 5년의 추가 유예시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지만 국민의 상당수는 할랄 인증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으며, 2014년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할랄 인증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음.



## 사회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0월까지 식음료 기업에 BPJPH의 할랄 인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품 유통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음.
- 2021년 정부령 제39호(GR39/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 유형별로 계도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음식료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

[표 3] 할랄 인증의 주요 적용 대상 제품 및 제품별 계도기간

적용 대상 제품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 2024.10.17.  2021.10.17.~ 2026.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약외품(OTC)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의약품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의료기기(A등급)	
의료기기(B등급)	
의료기기(C등급)	

자료: 2021년 정부령 제39호

- 동 정부령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지된 하람(haram)\*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람 재료가 포함된 제품들을 비할랄 제품으로 분류하고 비할랄이라고 표기 후 할랄 제품과 별개로 관리·유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 할랄은 근본적으로 '허용된 것'을 의미하고, 할랄의 반대되는 개념인 하람은 '부정한 것'을 의미함. 할랄과 하람은 음식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개념임.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체계와 할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올 2014년 할랄 제품 보장법의 핵심 내용은 ①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②할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할랄이 아님(non-Halal)을 명시해야 하며, ③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의 할랄 여부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할랄 인증 대상에 포함되고, ④제품 생산을 총괄하는 관리자가 무슬림이어야 함.

## 국제관계

### 비동맹 중립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적극적인(bebas-aktif) 외교노선 고수

- 인도네시아의 역대 행정부는 '자유롭고(독립적)-적극적'이라는 의미의 'bebas-aktif'라는 외교원칙을 계승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어로 'bebas'는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세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aktif'는 국제적 사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함.
- 1948년 당시 인도네시아 부통령이었던 하타(Mohammad Hatta)는 미국과 소련이 두 진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도네시아의 외교 원칙으로 'bebas-aktif'를 처음 언급했으며, 이후 모든 정권이 각자의 방식대로 'bebas-aktif'를 실천하고 있음.
- 2022년 동남아 국가로서는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처음으로 G20 의장국을 수행한 인도네시아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개된 서구와 러시아 간 갈등 속에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외교적 자율성을 추구했음.

###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외교관계 모색

-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은 올 4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일본과의 외교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말레이시아와 양국의 협력 강화와 국방에 관해 논의하였음.
- 프라보워는 낙선 후보들의 선거 불복으로 방문 시점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정상외 방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자신의 첫 해외 특별 방문을 주변국들이 자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줌과 동시에, 조코위 행정부의 외교노선을 계승할 것임을 주변국들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친중국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라보워가 중국 방문에 이어 바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인도네시아 외교가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비동맹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함.

## 외채상환태도

### 구제금융·채무재조정 이후 원리금 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SDR111억(157.1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았으며, 외채상환 부담 증가로 채무상환을 2010년까지 유예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2006년 전액 조기상환하였음.
- 한편, 파리클럽을 통하여 체결된 총 8건의 채무재조정 협약 중 5건\*에 대한 원리금은 전액 상환하였으며, 1998~2002년 중 체결된 채무재조정 3건에 대한 원리금은 안정적으로 상환 중임.

\* 1966·67·68·70년 및 2005년, 총 53.9억 달러 상당

- 재조정된 상환계획에 따르면 1998년과 2000년 체결 건은 ODA 잔액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 체결 건도 상환 시작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미상환 원리금 잔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표 4] 인도네시아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약 개요(상환 진행 건만 포함)

체결연도	대상 건	대상금액 (억 달러)	상환기간(거치기간)	
			ODA	비(非)ODA
1998	1998~2000년 중 만기 도래분	41.8	20년(n.a.)	11년(n.a.)
2000	2000~2002년 중 만기 도래분	54.5	20년(7년)	15년(3년)
2002	2002~2003년 중 만기 도래분	54.7	20년(10년)	18년(5년)

자료: Paris Club

- 2023년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 161억 9,530만 달러(단기 31억 3,590만 달러, 중장기 130억 5,940만 달러) 중 연체액은 1,000만 달러(단기 760만 달러, 중장기 240만 달러)로, 연체비율(0.06%)이 낮고 재조정된 스케줄에 따라 연체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등 상환태도는 대체로 양호함.

\* 주요 ECA 여신잔액(2023.9월 말, 억 달러): 일본(32.3), 한국(36.4), 프랑스(44.2), 독일(7.7) 등

- 미 수은, 영국 UKEF, 독일 Hermes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공공·민간 부문 모두 만기 제한 없이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UKEF는 중장기 인수자금에 대해서는 현지화 취급도 가능하나, 종교·인종 갈등에 따른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시 프로젝트 소재지에 따라 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표명함.

\* 미·영·독 ECA의 여신잔액(2023.9월 말, 억 달러) : 미국 0.7, 영국 2.5, 독일 7.7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3.06)	3등급 ((2022.06)
Moody's	Baa2 (2018.04)	Baa3 (2022.02)
Fitch	BBB (2024.03)	BBB (2023.09)

### OECD,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양호한 기존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12년 국제수지 개선 및 외국인투자 등 자본 유입 증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 2020년 3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루피아화 가치가 일시 폭락하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긴급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한 이후, 4월 S&P는 정부의 재정 및 채무부담 악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2022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호조로 대외 부문 또한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용등급 전망을 다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하였음.
- Moody's와 Fitch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용등급 및 전망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양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무부담이 동일한 신용등급의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며, 세계 16위의 GDP 규모, 인구 4위의 내수시장 등 거대 경제규모가 대외충격 흡수기제로 작용한다고 평가하였음.
- Fitch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상한선 적용(GDP의 -3%)이 공공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단, 낮은 재정수입(GDP 대비 15%, 2023년 추정)으로 인한 공적채무 상환능력 저하, 외자 유출 및 환리스크에 노출된 채무구조, 재정관리법 적용 유예로 인한 공적채무 증가 가능성 등은 위험요소로 지적하였음.

-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에 힘입어 정부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5.0%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금년 2월의 선거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선거로 인해 투자를 유보하던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프라보워 당선인이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시사하며 국가 재정적자 상한선(GDP의 -3%)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경상수지 적자 보전 및 인프라 구축 자원 확보 등을 위한 대외차입 등으로 외채잔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최근 수년 간 30%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2023년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잔액 161.9억 달러 중 연체액은 1천만 달러로, 연체비율(0.06%)이 미미하여 채무상환 태도는 양호한 편임.